

# 농협, '과잉생산' 양파값 회복에 882억원 긴급 투입

### 도매가격 작년보다 30% 하락 농가 피해

### 무이자 자금 구매·수출 지원·손실 보전

농협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 지원을 위해 총 88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무이자 자금 지원부터 손실 보전, 수출 확대, 소비 촉진까지 종합 대책을 추진해 양파 가격 회복과 농가 경영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무이자 자금 지원 △손실 보전 △수출 지원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산지 농협의 구매 확대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을 특별 편성했다. 해당 자금은 추가 구매와 상품화, 선별

작업 등에 활용돼 시장 출하 물량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손실 보전 사업도 추진한다. 총 32억원 규모로, 농협 공판장 전속 출하 물량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kg당 최대 200원을 지원한다. 공동마케팅 사업에 참여한 농협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kg당 50~150원의 차액을 보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생종 양파 출하 연기 사업에도 참여한다. 7

월 이후 출하 물량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kg당 최대 24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잉 공급 물량 해소를 위한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은 26억원을 투입해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물량 2000t까지 kg당 135원을 지원하고, 초과 물량 8000t에 대해서는 농협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연말에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역 농협별로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소비 촉진 사업에는 24억원이 투입된

다. 농협은 하나로마트 할인행사를 비롯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 확대, 군납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 금융점포 무더위쉼터에서 양파즙을 제공하고, 농협주유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양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농협은 최근 양파 수출 확대 업무협약 체결과 양파 팔아주기 캠페인, 할인 판매 행사 등을 추진하며 수급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양파 공급량 증가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농가의 어

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생산한 양파가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안정과 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가락시장 양파 도매가격은 kg당 5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2원)보다 약 30% 하락했다. 올해 중만생종 양파는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면서 전체 생산량이 평년보다 4만1000t 증가한 108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호박인절미, 송정역서 만나요”

### 광주시, 6월 창의떡집 팝업행사

광주의 대표 향토기업인 창의떡집의 인기 제품인 호박인절미를 광주송정역에서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지역 대표 미식 브랜드인 창의떡집과 협력해 6월 한 달 동안 KTX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광주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창의떡집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시는 최근 미식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광주를 찾는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들에게 지역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고, 향토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번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창의떡집은 오랜 전통과 차별화된 맛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광주 대표 떡 전문 브랜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표 상품인 호박인절미를 비롯해 코코아설기, 무지개설기, 흑임자인절미, 모듬찰떡, 녹두통발찰떡, 약식 등 10여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광주송정역 이용객들은 기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광주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며, 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MZ세대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팝업스토어가 광주를 대표하는 미식 콘텐츠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향토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는 지역 대표 미식 브랜드인 창의떡집과 협력해 6월 한 달 동안 KTX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사진제공=광주시청

## 전남신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 도비 1억5000만원 투입...자영업·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전남신보보증재단은 고물가·고금리 장외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도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전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참여 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전남도 도비 100%로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가입한 도내 자영업

자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 등 '1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이다.

먼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최 소 8190원에서 최대 1만5210원까지 전액 도비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1등급과 2등급 가입자의 경우 정부 지원(80%)과 재단 지원(20%)을 합산하면 실제 본인 부담금이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

업(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사업장)과 연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하며 근로자 1명당 매월 최대 6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올해 1월 납입액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올해 초부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소상공인도 지난 몇 달간의 지원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소상공인이 전남신보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재단이 기초사항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 자료와 연계해 최종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는 전남신보보증재단 홈페이지 공문을 확인하거나, 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남광주농협, 상반기 '윤리경영대상' 수상

### 내부통제 강화·청렴문화 정착·사회공헌 등 호평

농협 광주본부부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6월 정례대회에서 남광주농협이 '2026년 상반기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범농협 청렴문화 확산과 선도 농·축협 육성 위해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남광주농협은 선제적인 내부통제 관리 체계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믿음으로 상생하는 남광주농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직원이 청렴 경영 실천에 동참하며 투명한 조직 운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써온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남광주농협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



남광주농협이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6월 정례대회에서 '2026년 상반기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영중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투명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광주농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관원 전남지원,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 음식점·식자재마트·양곡업체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미국산 밥쌀용 쌀의 국내 유통 확대에 대응해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공매를 통해 미국산 밥쌀용 쌀(칼로스·Calrose)의 판매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산 쌀은 20kg 기준 4만7000~5만5000원 수준으로 국내산 쌀(6만~7만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원산지 혼동이나

허위 표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올해 연말까지 국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 미국산 밥쌀용 쌀은 약 1만7200t 규모다.

농관원은 미국산 쌀 유통이려 자료를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국내산 혼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5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 등 총 6곳이 적발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고령화 알지만 대책은 없다”...기업 대응 제자리

### 기업 대다수 '정부 고령사회기본계획' 인지 못해

### 전문가들 계속고용·재취업 지원 실질화 등 제언

기업 현장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이 사회적 인식 확산 속도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 연구팀이 36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대다수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

율이 20.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년으로, 독일(36년), 미국(15년), 일본(10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압도적인 속도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고령사회 대응을 '경영 과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은퇴 준비 지원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은 “퇴직 이후는 기업의 책임 밖”이라는 인식이 강

해, 실질적인 제도를 갖춘 곳은 일부 대기업에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고령 인력 운용 방식은 극명하게 갈렸다.

대기업은 정년 60세 이전에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인력 구조를 관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를 떠날 당시 고령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2.9세로, 법정 정년보다 무려 7년 이상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연장 수단으로 가능하기보다 조기 퇴직의 사전 단계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양상이었다. 건설, 기초제조업 등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경험 기반 숙련인력'으로 평가하며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령자 고용의 동기가 사회적 책임이나 정책 준수가 아닌 '인력난 해소'라는 점은 고령 고용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팀이 전문가 델파이 조사(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대면 토론 없이 익명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해 의견의 합의를 도출하는 정성적 예측 기법)를 통해 도출한 기업 참여가 시급한 정책 과제 1위는 '계속고용 관련 중도인 퇴직 제도 개편'이었다. 이어 일·생활 균형 실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장시간 근로 해소, 계속고용 지원

확대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다.

기업 우수사례 중 정책화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범주 역시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4.73점, 5점 만점)였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축삭직 제도, 동국제강의 지속고용 방식, 일본의 계속고용 법제화 사례 등이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삼성 시니어디지탈아카데미, KT 퇴직예정자 기술교육 등 고령자 재취업·역량강화 교육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3.40점)를 받았다. 주목할 대목은 기업의 '선택적 관심'이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 한미글로벌의 셋째 낳으면 승진 등 일부 대기업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응 사례는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정부도 이런 기업 사례를 제도화에 참고하며 정책을 확대

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 대응은 다르다. 연구팀은 기업이 저출산 대응에는 적극적이면서 고령사회 대응에 소극적인 이유로 가치 호보 효과의 차이,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사회 대응이 곧 비용이라는 경영진의 인식을 꼽았다. 이에 반해 연구팀은 CSR·CSV·ESG 관점에서 고령화 대응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계속고용 제도의 유연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실질화, 고령 근로자 특화 산업안전 기준 마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제안했다.

황해윤 기자 nab@gjdream.com